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82호 1판 (음력 8월 10일)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68억짜리 애물단지 신안 도초 '사파리'

전남도, 사업 부지 활용방안 놓고 고심 또 고심

개발하자니… 민자유치 어렵고
농작물재배…추가비용·난개발
방치하자니…"예산낭비" 지적

사업타당성이나 외자 유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민선 6기 들어 중단된 사파리아일랜드 사업 부지가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단체장의 판단에 의존해 국내외 사례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의 경우 대규모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수익구조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업 중단이나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오는 23일 신안군 도초도 발매리 사파리아일랜드 사업 매입부지를 각계 전문가와 교수, 투자의향 업체 등과 함께 찾아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주민 면담을 마치고 부지 형태, 토질, 투자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8월 5일에도 12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지 개발, 농업·천일염 관련 기업 유치 및 공장 설립, 경관 숲·작물 식재, 친환경 농작물 재배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전남 섬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중 하나로 야생동물원, 즉 사파리아일랜드의 조성 대상지를 신안 도초도로 선정하고, 이후 7억원의 예산으로 '야생동물 복원공원 조성 및 기본구상 용역', '사파리 아일랜드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원 118만7000㎡에 1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파리와 체험·놀이시설, 화조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사파리아일랜드 사업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여간 전남도가 68억원을 투입해 ㎡당 6650원에 구입한 118만7000㎡의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로 부상했다.

전남도는 단기간에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해 농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모두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민자 유치가 어려운데다 농작물 재배 등에는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고, 자칫 현재의 경관을 헤치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준 박사는 "서둘러 개발하면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보다 전체적인 조망을 유지한 가운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휴양지 조성이나 단지 개발, 도시재생 등에 있어서 국내·외 사례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지자체의 '베끼기 행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 수요 판단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 없이 단체장의 즉흥적인 판단이나 단기간 성과를 중시한 개발은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사파리아일랜드 부지〉

무등산 군부대 이전 협의체 내달 2일 발족 첫 회의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의 군부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광주일보 8월 27일자 1면, 28일·31일자 3면〉이 거센 가운데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의체가 다음 달 발족돼 첫 회의를 연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오후 4시 광주시청에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논의하는 협의체 발족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군부대 이전 취지를 확인하고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법 개정, 협약 체결 등을 논의한다.

권 의원은 "협의체를 통해 무등산 군부대 이전비용과 대체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씩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국방부와 환경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

추석을 기다리는 능성어 민족대명절인 추석(27일)을 6일 앞둔 21일 완도군 완도읍 한 부둣가 덕장에서 어민이 제수용품으로 판매할 능성어를 햇볕에 말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물수능에 반수생 급증
대학 신입생 휴학 '비상' ▶6면

블루오션 다도해
고흥 연홍도·하화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농산품 중국 판로 개척하려면 고급화·친환경·편의성 높여야"

어명근 농경연 연구위원 제안

한중 FTA를 대비해 한국 농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시장의 특성과 현지 유통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한중수교 23주년을 기념해 광주일보사와 호남대 복합형리조트 인재양성사업단, (사)한중관광문화포럼 주최로 영암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열린 '한중 공동 번영 길을 묻다'세미나에서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한중FTA 농업 협력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 농산품의 판로개척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관련기사 5면〉

어 위원은 먼저 중국 농산물 유통시장의 특성을 '고급화, 안정성, 편의성 중시'로 집약했다. 우선, "위신과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문화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선물용 농산품 구매시 높은 가격대의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해 한국 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내에서 빈발하고 있는 불량식품 문제에 매우 민감하므로 친환경 유기농 등 한국 농식품의 높은 안전도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시장을 점유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핵가족이 확산하고 있어 청년층을 타깃으로 수출 전략을 수립하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광주·전남권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문 위원은 "숙박, 음식, 쇼핑, 엔터테인먼트, 관광 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지역 관광의 홍보 마케팅,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우러져야 늘어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광주 전남에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왕시엔민(王憲民) 주 광주 중국총영사가 '중한 FTA와 AIIA(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일대일로(一帶一路)'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발전을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비례대표 줄일 수 있다"

김무성 "획정위 案 비이성적"
여야 대표 회동통해 수정 관심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선거구 획정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지역구 규모를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지적하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놔 비례대표 의석 수 감축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조직본부장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244~249개) 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선거구 획정위의 안대로 한다면 호남의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다"며 "당에서 비례대표 의석 현행 유지 등 원칙적인 방안만 주장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호남 등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윤석 의원은 "최고위 직후, 문재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비례대표 의원 정수 유지 기조를 유지해야 하나'고 묻자 문 대표가 '아니다. 꼭 그렇지 않다. 농어촌 의원들이 소신껏 주장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획정위 안을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지적하며 "정개특위를 빨리 열어 여야 간 기준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